다산포럼

모두의 책임과 집합적 효능감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새 정부가 출범하며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난 듯하다. 어느 정도 일상의 감각이 돌아오고 국내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많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되찾았지만 나라의 일을 맡은 분들은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발을 축하하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새 정부의 국정 구상이 바쁘게 이루어지는 요즘, 재난 연구에서 회복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는 책임과 집합적 효능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영어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공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 법적 책임(liability),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책임(responsibility)등 다양한 어휘로 존재한다. 학교에서 학과장으로서 한 조직의 책임을 맡다 보니, 책임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법적 책임, 통상적 업무 수준의 책임은 물론, 그 너머의 책무성과 도덕적 책임, 그리고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의 영역이 있다. 단순히 수업과 지식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탐색해보며 열린 세상을 만나며 자신의 역량을 펼쳐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권한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엄청난 압박과 경쟁 속에서 성장과 기회가 축소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세계의 확장과 역량 도약의 기회는 물론 한계가 있고, 모든 학생에게 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생들이 넓은 세상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획서를 쓰고, 외부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경로를 탐색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권력은 책임을 법적 또는 관료제적 통상 책임의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인식하고 최소주의로 작동했다. 그 결과 사람을 살리지 못했고 억울한 죽음과 참사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이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한 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느린 재난'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재난 회복력 사례를 보면 집합적 효능감이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다. 심리학자 반두라와 사회학자 로버트 샘슨이 발전시킨 개념인 집합적 효능감은 구성원들이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과 행동을 공유하는 집단적 능력이다.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힘과 의지를 바탕으로 공통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사회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차원의 효능감으로,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공동체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뢰와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끊임없는 조율과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에 주목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상충하는 이해와 정서를 조율하며, 함께 문제에 대한 응답능력을 키우고 해결해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작년 겨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여의도 국회 앞 광장은 노동자, 아리셀 참사 유족,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젊은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또한 40대와 50대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탄생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의 설계와 비전 수립에 참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특정 세대, 성별, 정파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책임을 공유하며,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효능감을 가질 때 새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NGO 칼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공을 위한 묘책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의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 정부가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정책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해법이 있다.

바로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이는 이념적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제안이다.

한빛1·2호기는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가동을 시작해 2025년과 2026년에 설계수명이 도래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이미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강행 중이다. 문제는 이 두 원전이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사고를 기록했고 격납건물 철판 부식, 내진 설계 미비, 제어봉 오작동 등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옛날 기준에 따라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중대사고 대응방안과 주민 보호 대책도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절차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송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막혀 있는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계룡 송전선로 건설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이 선로는 15개 시군구를 가로지르며 250여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다. 게다가 현재 한빛1·2호기는 아직 수명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월성1호기 폐쇄 때와는 달리 사법적·정치적 부담도 없다.

이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을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이 흐름에 합류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효율적인 설계와 냉각 기술의 발전 덕분에 안정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는 지역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호남권은 전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이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고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중단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공을 위한 묘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재명 정부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아직 국정과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핵발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했지만 일부 대선 토론에서는 "필요하다면 수명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고,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수원과 원전 계속운전과 SMR 개발을 약속하는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SMR지원 특별법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새 정부가 핵발전 유지와 진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시대착오다.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모두 '핵발전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안전이 담보된 원전"이라는 말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표현이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의 기술 낙관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남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제가 아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란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참여권을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점이다. 새 정부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불평등이라는 복합적 위기 앞에 정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에너지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호남권을 정의로운 전환의 선도지역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다.

기 고

지방 분권 선도모델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박종원
전남도의원·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고유한 비전과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이양되는 구조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다핵 균형국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남해안권의 핵심 거점이자 풍부한 해양 자원과 광활한 녹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전남은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남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전남은 3MW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조차 갖지 못한 채 중앙의 규제 속에 발이 묶여 있다. 지역이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남이 처한 지역소멸의 현실이다. 인구는 이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지역대학의 쇠퇴, 농어촌의 급속한 공동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소멸 위기의 생생한 징후들이다. 일회성 재정지원이나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이처럼 구조화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전남이 필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의 힘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제시한 '전라남특별자치도'는 단지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 경로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구조 개혁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포함해 지방산단 조성, 관광단지 지정, 농촌활력지구 선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권한 이양이 담겨있다.

이미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전환되었고 제주와 강원도 역시 자치권 확대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이 이 흐름에 뒤처진다면 자칫 지역 간 제도적 불균형과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을 입증해야 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전남의 특별자치도 지정은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방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지방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전남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차별화된 지방분권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전라남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재정 특례, 규제 권한 이양 보장으로 다핵 균형국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함께하는 이 길에서, 전남은 스스로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간절한 염원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社 說

광주가 선점한 'AI 중심도시' 사활 걸고 지켜야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민선 7기 타 지자체가 정부에 SOC 사업을 요청할 때부터 광주시만 AI산업 투자를 요청했고 민선 8기 들어 인프라 확충에 나서 'AI 중심도시'라는 입지를 선점했다.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269억원을 들여 AI 기술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으로 AI를 실제 업무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AX실증밸리 조성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수준인 10만장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유치하는 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AI 중심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는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지자체들이 AI 인프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정부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분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SK그룹의 울산 AI데이터센터 건립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은 울산을 AI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연구 중심이고 실제 산업현장은 울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산업을 볼 때 일자리를 창출하는 알맹이는 SK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 울산에 있고 광주는 연구 시설만 있다는 의미로 광주가 실속없는 AI 중심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데이터센터를 전국 5대 권역에 분산하겠다는 AI 고속도로 구축 정책에서 알 수 있듯 정부도 한 곳에 인프라를 집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AI 산업은 국가가 주도하지만 울산에 SK가 투자한 것처럼 민간의 투자와 병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는 민선 7기부터 선점한 AI 선도도시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능한 지원을 이끌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는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규제 피해가는 소규모 님비시설 촘촘한 검증을

반려동물장묘업체가 목포시 대양산단에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인데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작정 반대만 한다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규제를 피할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사업자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반려동물장묘업체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양산단 내 동물화장장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보안 요구를 받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사업계획이 취하당했는데 최근 다시 계획서를 제출했다.

소각 용량은 하루 48 t 으로 100 t 미만일 경우 대기·수질·토양·생태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만큼 주민공람이나 협의절차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업체 측은 자체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소각시설 가동 이후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주변에는 규제를 피해가는 소규모 님비시설이 많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을 무작정 용인할 수는 없다. 관계기관은 보다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님비시설을 놓고 지역에서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민 분열

다문화(국제결혼) 가정과 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이민자 수가 국민의 5% 가량을 차지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이민자들이 국가 구성원이 된 상황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차별적 용어이며 국가 통합보다는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계를 차치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주부가 없으면 산업 현장은 물론 농업까지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총인구수 대비 2.8%이던 이민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총인구의 5.1%에 달하는 261만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수년 새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들도 증가해 이민자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민자가 늘면서 민족 단일성의 훼손과 사회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상 이민(귀화)의 역사는 고대로 올라간다. 역사 속 이민자 중 가장 유명한 이는 13세기 정변을 피해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손 '이용상'일 것이다. 베트남 리 왕조 영종 황제의 일곱 번째 아들인 이용상은 1226년 정변이 일어나자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가려다 태풍을 만나 황해도 옹진반도에 정착했다. 이후 몽골군을 격퇴하는 공을 세워 고려 고종으로부터 '화산 이씨'라는 새 성을 받아 일가를 이뤘다.

조선 인조 때는 박연이라는 우리 이름을 가진 외국인이 있었다. 1627년 조선 해역에서 표류했다가 귀화한 네덜란드인 '얀 얀스 벨테브레'는 첫 벽안의 귀화자였다. 그는 조선에서 대포·조총 등 무기 개발에 기여했다. 임진왜란 땐 '사야가'라는 왜장이 조선군에 투항해 큰 전공을 세웠으니 귀화명은 김충선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이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둘로 쪼개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이민자 단속에 나서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미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인구소멸이 가장 빠른 한국은 이민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을 타산지석 삼아 사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채희종 디지털 본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